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6년 1월 생산은 전월대비 1.3% 감소(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전 산업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서비스업에서 보험, 건설업, 광공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1.3% 감소했음.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4.1% 증가했음.
-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2.1% 감소했음(전년동월대비 7.2%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에서 늘었으나, 도소매,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보합이었음(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2026년 1월 소비는 전월대비 2.3%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6.8%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6.0%),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2.3%), 화장품 등 비내구재(0.9%)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2.3% 증가했음(전년동월대비 0.1% 증가).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15.1%) 및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4.0%)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6.8% 증가했음(전년동월대비 15.3%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0.0%)에서 공사실적이 보합이나, 건축(-15.0%)에서 공사실적이 줄어 전월대비 11.3% 감소했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월		
		2023	2024	2025p	2025				2025		2026
					1/4	2/4	3/4	4/4p	1월	12월p	1월p
생산	전 산업	1.1	1.5	0.5	0.0	0.0	1.2	-0.8	-0.9	1.0(1.9)	-1.3(4.1)
	광공업	-2.6	4.1	1.6	0.2	-0.1	1.6	-3.2	-1.7	1.5(1.4)	-1.9(7.1)
	제조업	-2.6	4.2	1.7	0.1	-0.2	1.5	-2.9	-1.7	1.7(1.4)	-2.1(7.2)
	건설업	7.8	-4.7	-16.2	-6.4	-3.2	2.7	-8.7	-2.8	5.6(-5.5)	-11.3(-9.7)
	서비스업	3.4	1.1	1.9	0.3	0.7	0.9	1.2	-0.7	0.5(3.1)	0.0(4.4)
소비	소매판매	-1.3	-2.1	0.5	0.4	-0.9	1.5	0.8	0.0	0.6(1.3)	2.3(0.1)
투자	설비투자	-4.8	2.9	1.7	-1.7	0.0	5.7	-7.9	-14.9	-4.3(-12.5)	6.8(15.3)
물가		3.6	2.3	2.1	1.2	0.2	0.3	0.6	0.3	0.4(2.0)	0.3(2.0)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 3) 2023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5년 2월, 2026년 1월, 2026년 2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6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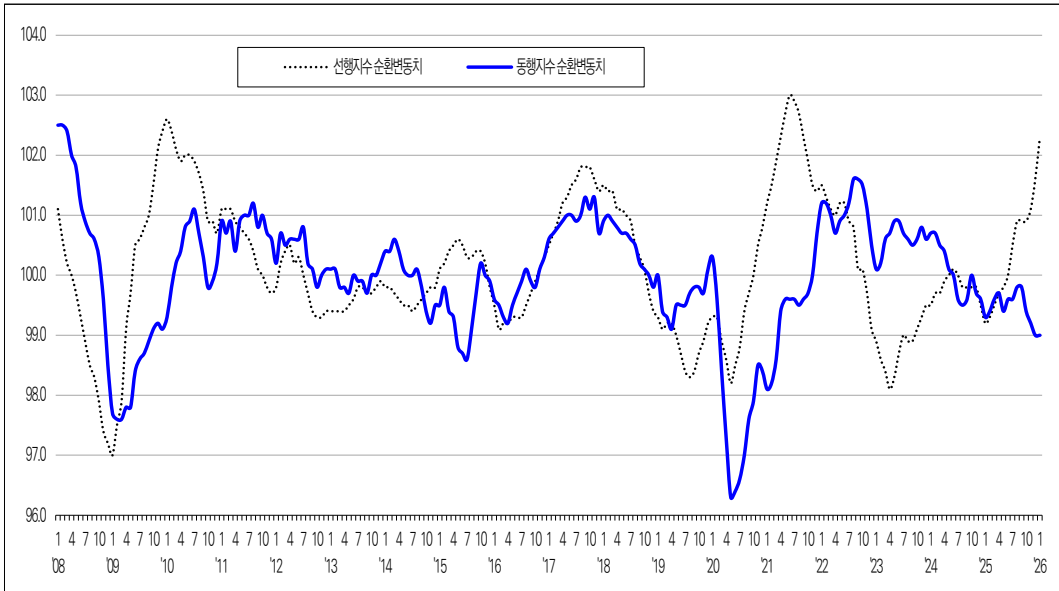
○ 2026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100)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했음(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를 지출목적별로 살펴보면, 전월대비 오락·문화(1.4%), 주택·수도·전기·연료(0.4%), 음식·숙박(0.4%), 교통(0.4%), 식료품·비주류음료(0.3%), 교육(0.2%), 기타 상품·서비스(0.2%), 주류·담배(0.2%)는 상승, 의류·신발, 통신은 변동 없고, 보건(-0.2%), 가정용품·가사서비스(-0.1%)는 하락했음.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6%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1% 상승하여 전월대비 0.3% 상승했음.

◆ 2026년 1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9%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임.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7p 상승했음.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기종합지수』,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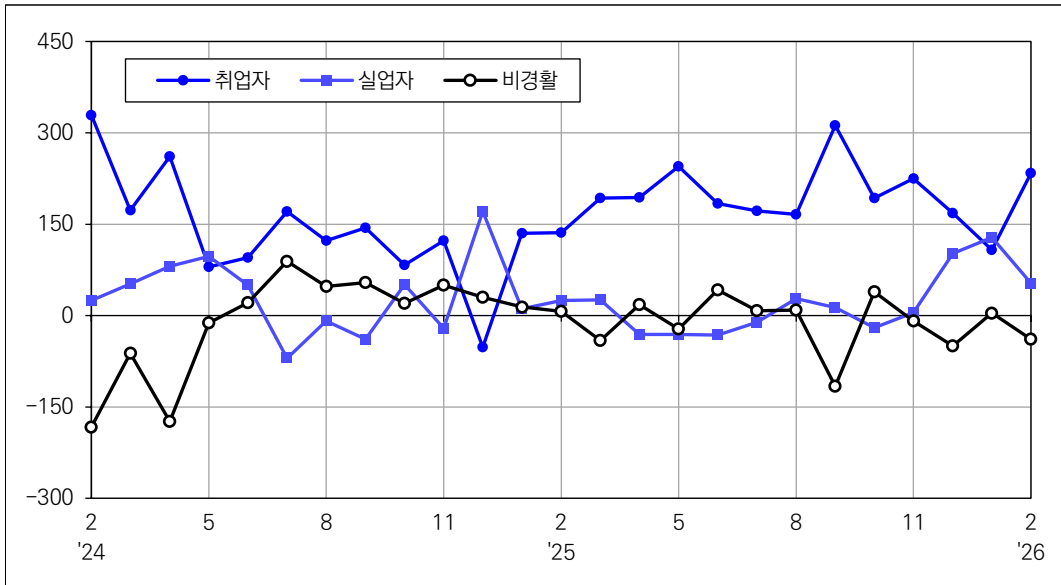
● 고용 동향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전월대비 계절조정 취업자 수 증가

- 2026년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3만 4천 명 증가(전월대비¹⁾ 14만 1천 명 증가)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20대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50대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제조업·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은 감소폭이 축소됐고,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됨.
 - (서비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협회·개인서비스에서 감소로 전환된 반면 보건복지 및 예술·스포츠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임시직과 자영자에서 증가로 전환됨.
 - (실업·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5만 4천 명 증가(전월대비 2만 2천 명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3만 9천 명 감소(전월대비 9만 1천 명 감소)함.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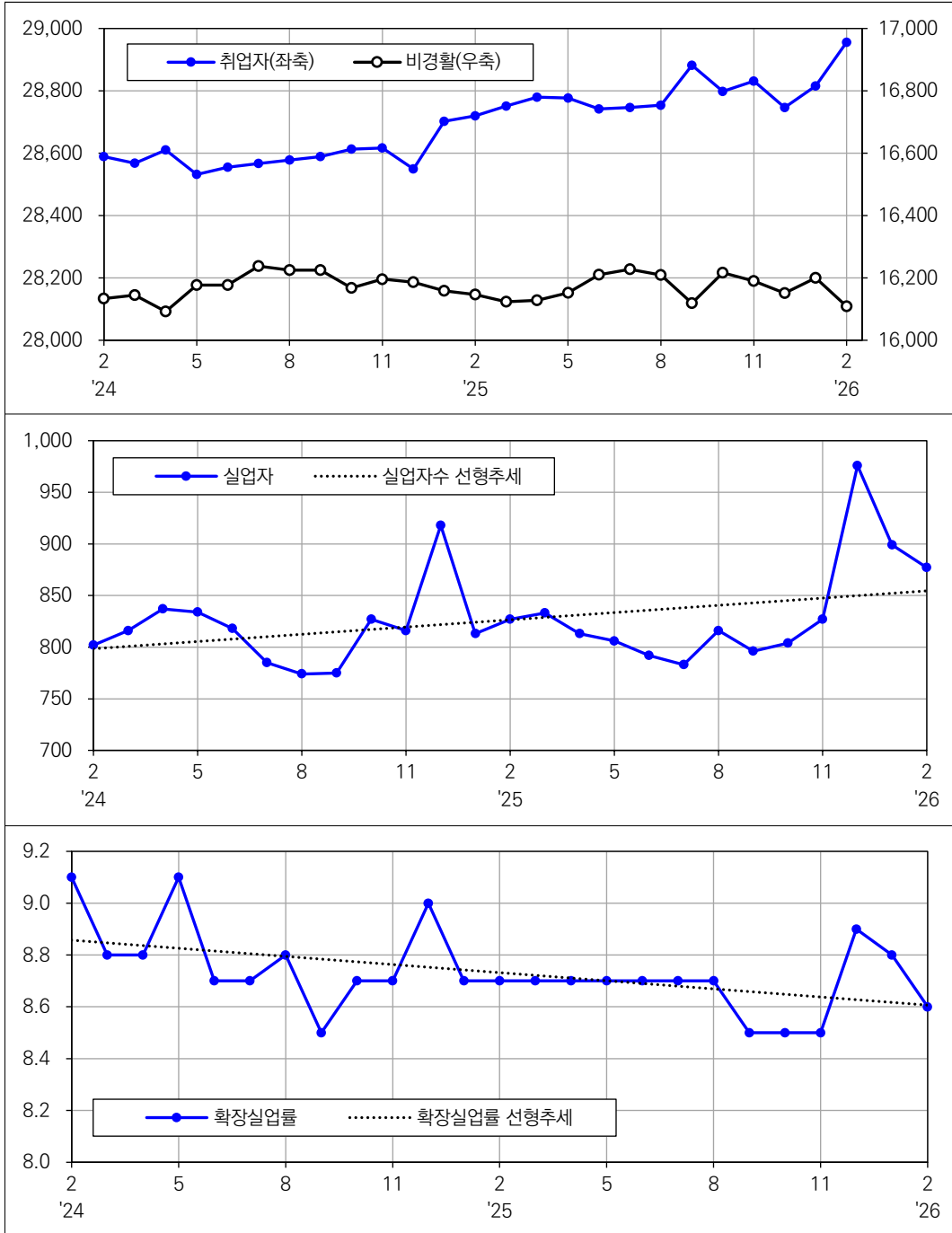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국가데이터처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상), 실업자 수(중) 및 확장실업률(하) 변화

(단위 : 천 명)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별) 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20대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50대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20대 취업자 수는 숙박음식 및 교육서비스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예술·스포츠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정보통신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도소매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50대 취업자 수는 숙박음식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전문과학기술에서 감소로 전환됨.
 -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 도소매 및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농림어업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됨.
 - 실업자 수는 30대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2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60세 이상에는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50대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취업자	28	24	17	(-4)	-140	-199	-163	(2)	83	101	86	(0)
실업자	3	8	11	(1)	2	12	7	(-1)	53	25	49	(22)
비경황	-4	3	13	(8)	-65	-15	-43	(-15)	-55	-42	-51	(-14)
실업률	1.0	3.8	5.4	(0.9)	0.3	0.7	0.5	(0.0)	0.8	0.4	0.8	(0.4)
고용률	1.2	1.0	0.7	(-0.2)	-0.3	-1.4	-0.8	(0.1)	0.2	0.5	0.3	(-0.1)
	40대				50대				60세 이상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12월	1월	2월	(전월비)
취업자	-33	-3	0	(-15)	-11	45	6	(-32)	241	141	287	(84)
실업자	8	-17	-22	(2)	-9	-1	-5	(3)	46	101	14	(-24)
비경황	-101	-99	-93	(6)	-37	-101	-61	(23)	212	257	195	(-19)
실업률	0.1	-0.2	-0.4	(0.0)	-0.2	-0.1	0.0	(0.0)	0.4	1.3	0.1	(-0.3)
고용률	0.9	1.2	1.2	(-0.1)	0.4	1.0	0.6	(-0.3)	0.2	-0.5	0.5	(0.5)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별) 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 예술·스포츠 및 교육서비스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정보통신업 및 건설업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됐고, 협회·개인서비스는 감소로 전환됨.
 - 전월대비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 공공행정 및 도소매 등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 전문과학기술 및 협회·개인서비스 등에서는 감소함.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농림어업	-117	-107	-90	4	-8	-7
광업	-2	0	1	2	1	1
제조업	-63	-23	-16	-20	47	1
전기·가스	10	3	5	-4	-1	0
수도·하수·폐기업	-5	-9	-13	-5	-5	2
건설업	-63	-20	-40	19	25	-26
도소매	44	23	22	15	-15	11
운수창고	72	71	81	-1	-14	17
숙박음식	-22	-16	-27	-2	6	10
정보통신업	7	-21	-42	-13	-6	-4
금융보험	28	18	22	-12	-4	1
부동산	11	30	35	13	5	5
전문과학기술	-56	-98	-105	-22	-32	-16
사업서비스	49	42	42	-13	-5	-9
공공행정	-4	-41	-30	-17	6	17
교육서비스	22	36	58	1	12	5
보건복지	220	185	288	-109	141	145
예술·스포츠	55	45	70	3	3	9
협회·개인서비스	5	11	-14	-5	11	-13
가구 내 고용	-22	-18	-15	-9	2	1
국제외국	-1	-2	1	0	-1	3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 2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임시직과 자영자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상용직은 증가폭이 축소됨.

- 상용직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감소로 전환됐고, 사업서비스 및 부동산에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도소매에서는 증가로 전환됨.
- 임시직은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도소매 및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일용직은 제조업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됐고, 협회·개인서비스에서 감소로 전환됨.
- 고용주는 숙박음식에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부동산에서는 증가로 전환됨.
- 자영자는 농림어업에서 감소폭이 축소됐고, 부동산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상용직	195	192	158	-23	17	-1
임시직	-7	-97	8	-300	153	136
일용직	25	26	39	20	0	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34	56	60	-19	12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23	-11	10	60	-3	24
무급가족종사자	-57	-58	-41	-22	-6	4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농림어업	-4	-3	-6	-11	-7	-9	-2	-2	-3	-2	-2	-9	-53	-50	-31
제조업	-22	15	-11	-26	-6	8	5	-4	11	-4	-1	-4	-18	-22	-17
건설업	-12	9	-2	-26	-14	-29	-4	-5	-14	-4	-3	1	-14	-5	4
도소매	-34	-20	1	19	-6	-49	-10	-21	-7	32	38	41	23	16	12
운수창고	49	38	40	15	8	5	-3	11	18	2	2	5	8	11	11
숙박음식	6	-7	-4	-50	-29	-18	5	10	10	25	23	16	10	7	-5
정보통신업	-25	-41	-55	20	12	0	-1	0	3	-5	-7	-4	19	17	15
금융보험	27	15	18	9	13	9	0	0	0	2	2	1	-9	-11	-5
부동산	23	19	12	0	14	9	-5	-3	-4	0	-4	5	-9	1	11
전문과학기술	-49	-93	-91	9	-7	-11	2	4	5	-15	-4	-6	-1	4	-1
사업서비스	27	27	12	-11	-11	4	35	26	24	0	0	5	-2	-3	-3
공공행정	4	4	13	-10	-45	-44	1	0	0	0	0	0	0	0	0
교육서비스	11	29	30	-7	-4	14	0	2	5	4	1	1	15	4	5
보건복지	161	167	165	55	3	115	4	4	1	7	12	9	-6	-1	-2
예술·스포츠	25	38	48	29	-3	19	3	1	1	11	10	10	-12	0	-5
협회·개인서비스	12	4	-3	-6	5	2	-3	3	-10	-17	-11	-10	23	18	14
가구 내 고용	0	1	2	-24	-23	-18	0	0	-2	0	0	0	2	4	4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비경황) 2월 전년동월대비 전직 1년 이내 일자리 경험이 있는 실업자는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축소됐고, 30대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 업종별로 60세 이상은 보건복지, 제조업, 공공행정 및 사업서비스에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30대는 사업서비스에서 증가로 전환됐고, 숙박음식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 비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은 '통학'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쉬었음'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여성은 '통학'에서 증가폭이 축소됐고, '쉬었음'에서는 감소로 전환됨.

〈표 5〉 전직 일자리 경험자의 주요 종사산업별 실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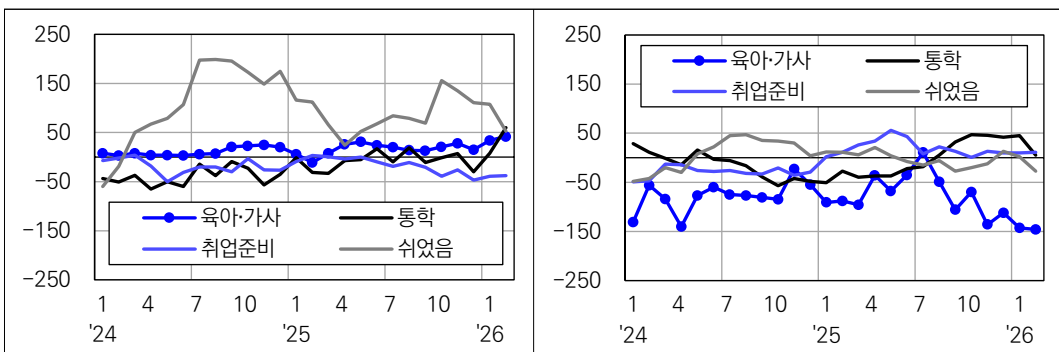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체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1월	2월
1년 이내 일자리 경험 유	103	31	8	2	13	37	-8	-19	0	-3	91	14
제조업	0	-7	-13	-9	-6	-1	-2	-6	11	7	8	1
건설업	-16	-22	-3	-3	-2	-4	-5	-5	-2	-9	-3	-1
도소매	20	19	6	12	13	8	-5	-9	4	5	2	3
운수창고	7	8	2	-1	-7	-2	12	12	1	0	-1	-2
숙박음식	-1	-5	2	-8	6	12	-2	2	-2	-7	-4	-4
정보통신업	-1	12	-1	5	1	6	-1	-5	1	3	0	2
금융보험	2	0	-1	-5	-1	0	-2	-2	5	7	1	0
전문과학기술	-4	2	3	9	-2	0	-5	-4	1	1	-1	-4
사업서비스	-5	1	-3	-2	-6	4	2	-1	-13	-7	14	8
공공행정	17	6	7	5	4	2	-1	-1	-1	-2	9	2
교육서비스	-5	-6	-4	-6	2	2	-1	-1	-6	-2	3	0
보건복지	75	13	-1	0	10	1	0	1	5	4	61	6
예술·스포츠	3	-7	5	-3	4	4	-2	-2	-5	-2	0	-5
협회·개인서비스	-1	4	3	1	0	6	1	1	0	0	-4	-3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성별(좌 : 남성, 우 : 여성) 및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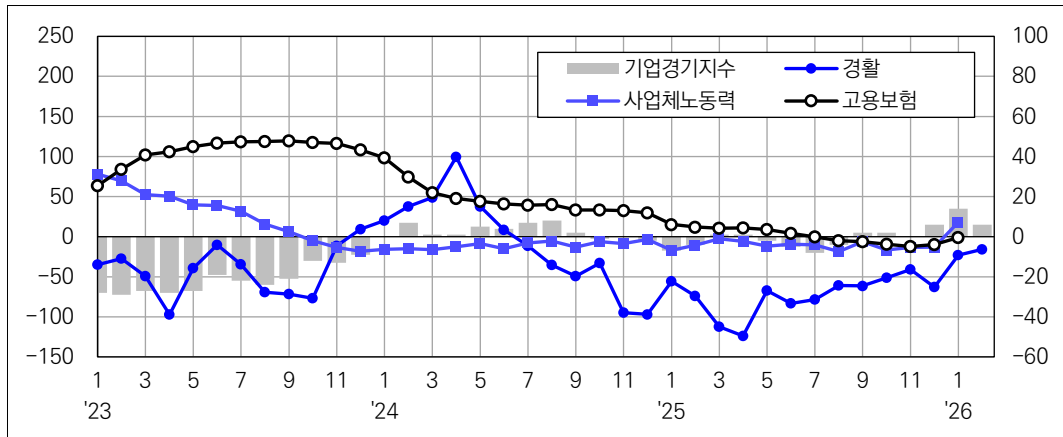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 크게 확대

○ 2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만 6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감소폭이 축소됐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증가로 전환됨.
- 계절조정 전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천 명 증가함.
- 기업경기지수는 82로 전년동월대비 6p 증가함.

[그림 4]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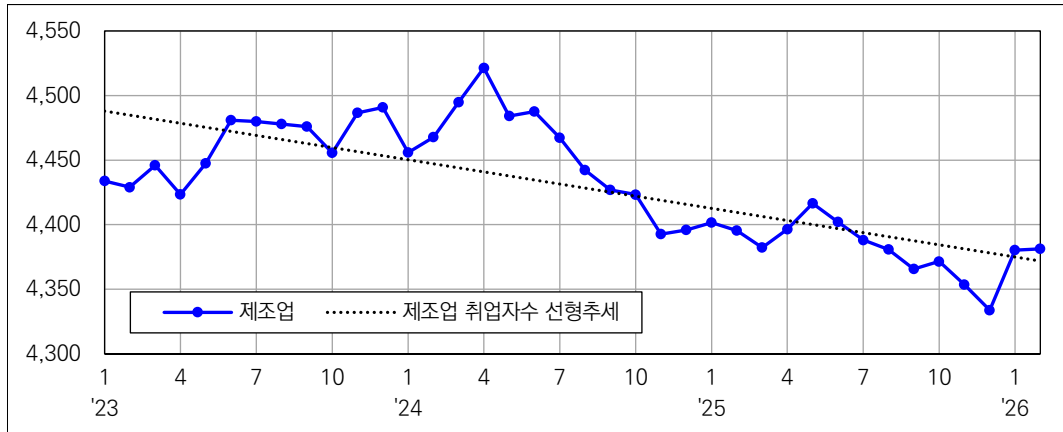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5]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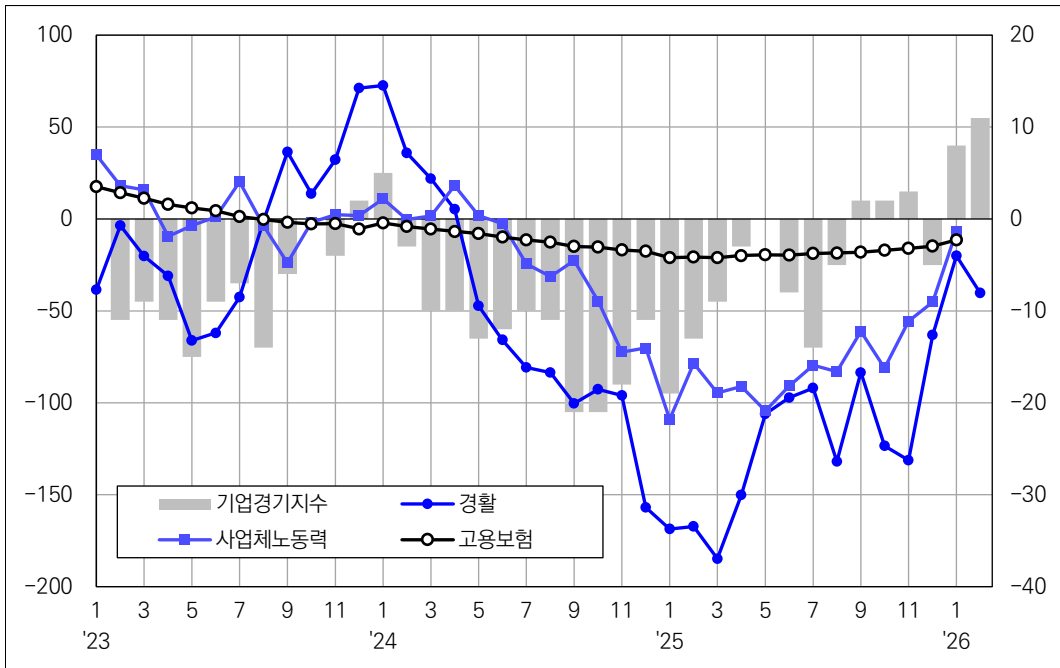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2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만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 감소폭은 축소됨.
 - 기업경기지수는 65로 전년동월대비 11p 증가함.

[그림 6]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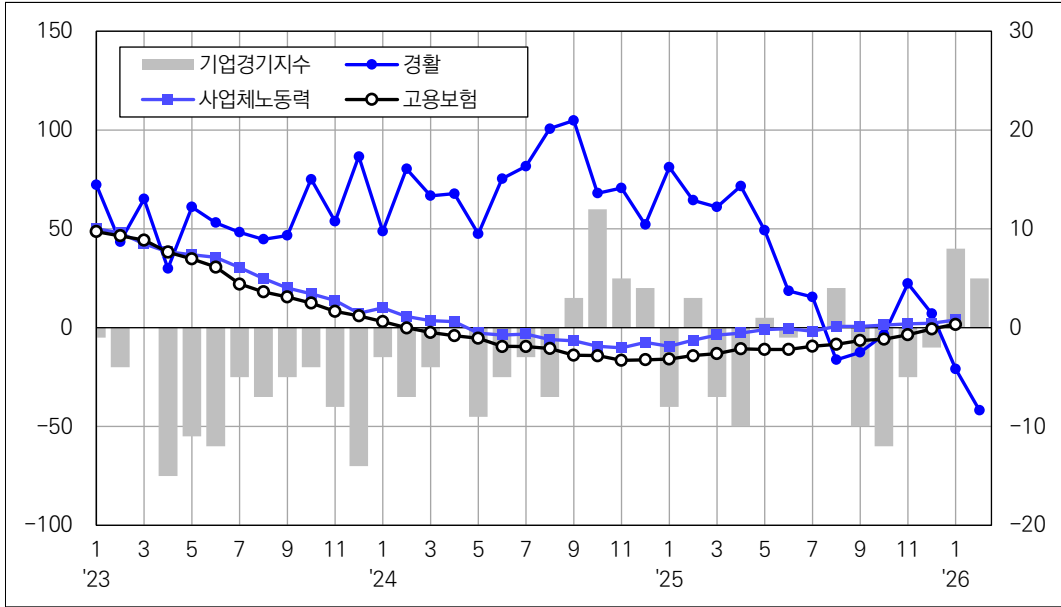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월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7만 4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확대된 반면 피보험자 수는 증가로 전환됐고, 사업체 종사자 수도 증가폭이 확대됨.
 - (전문과학기술) 취업자 수는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됨.
 - (보건복지) 취업자, 피보험자 및 사업체 종사자 수 모두 증가폭이 확대됨.
 - (예술·스포츠)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됐고, 사업체 종사자 수 감소폭도 축소됨. 기업경기지수는 전년도 감소의 기저 영향으로 증가폭이 확대됨.
 - (협회·개인서비스) 취업자 수는 감소로 전환된 반면 피보험자 수는 증가폭이 확대됐고, 사업체 종사자 수는 증가로 전환됨.

[그림 7]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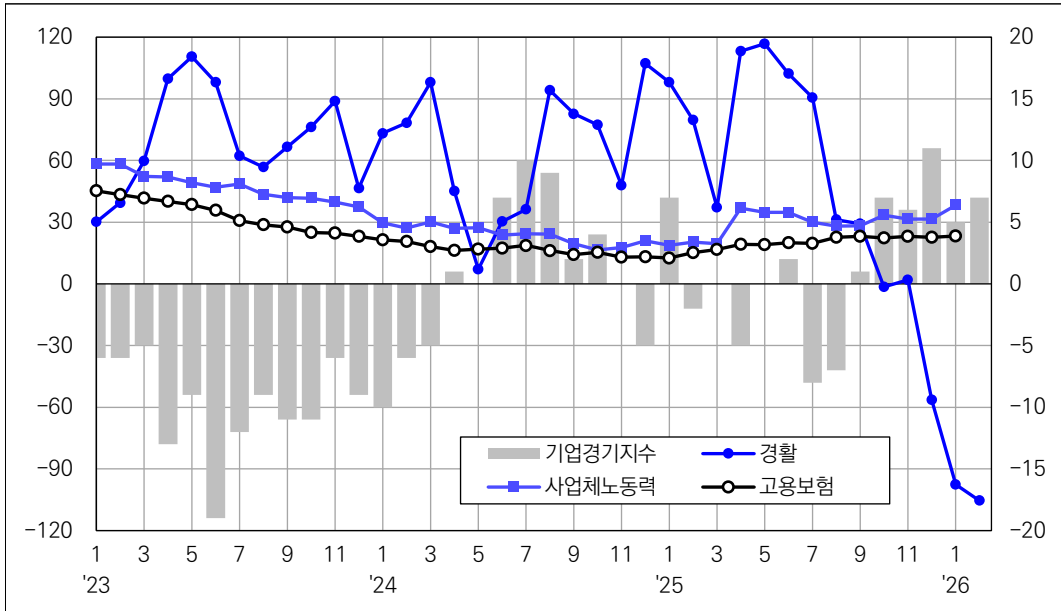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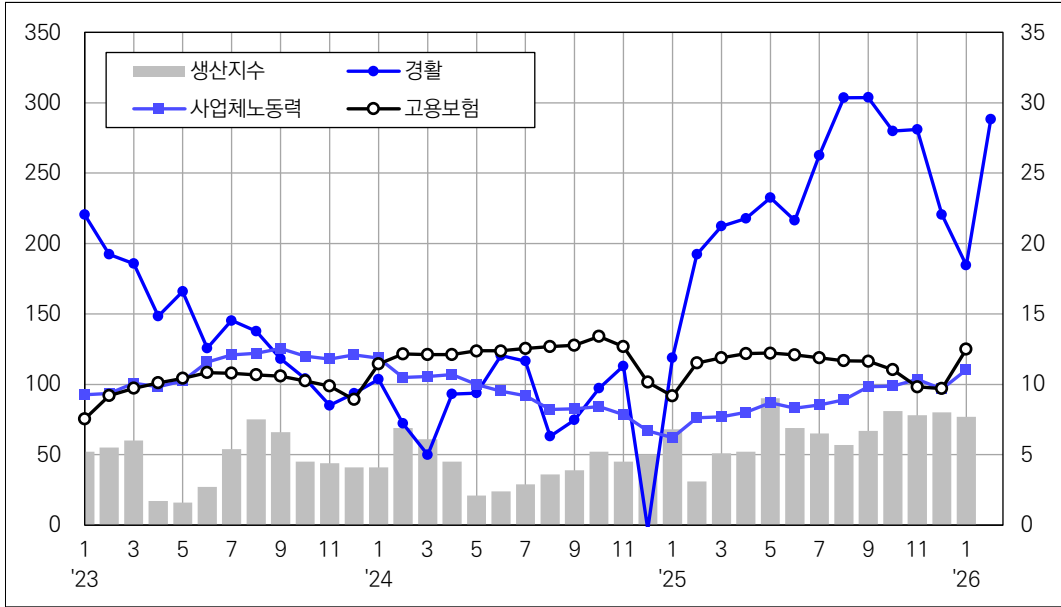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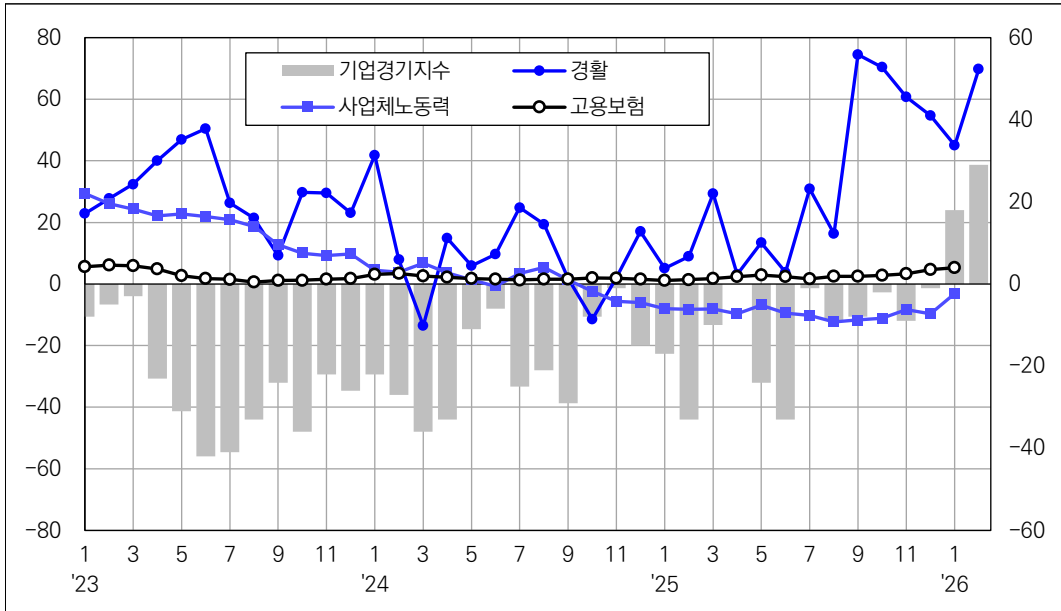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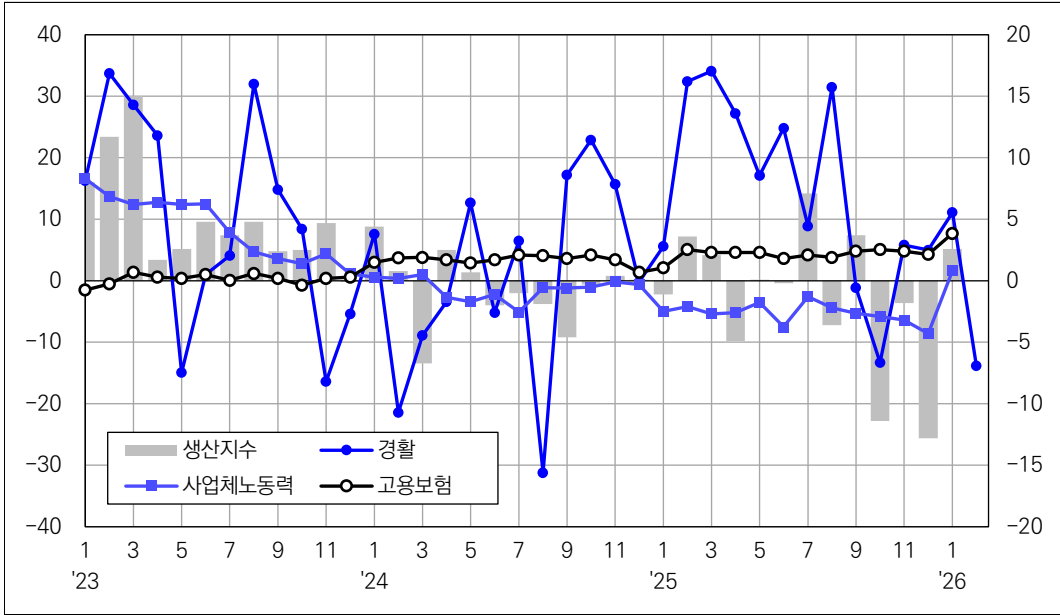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5년 12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 2025년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75만 원(3.1%)이었음.
 - 2025년 12월 상용근로자(507만 1천 원)와 임시일용근로자(179만 7천 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1%, 0.7% 증가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임금증가폭은 축소되었음.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4.0%p),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5.8%p), 건설업(-3.5%p), 제조업(-2.7%p,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1%p) 등에서 임금증가폭 둔화가 컸음.
 - 이들 산업에서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제조업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6.3%, -14.5%p)는 2024년 12월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임. 제조업 중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특별급여 증가폭(-40.6%p)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한편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0.7%)은 2024년 9월부터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던 추세가 증가로 전환하였음. 특히 정보통신업(29.0%), 숙박 및 음식점업(25.3%)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증가폭이 크게 증가하였음.
 -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한 데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증가한 데 기인함.

◆ 2025년 12월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404만 원)은 물가 상승폭 둔화와 명목임금 상승폭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둔화하였음.

◆ 2025년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각각 3.1%, 0.9% 증가

- 2025년 명목임금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증가한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였음.
 -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임금 증가폭은 전년대비 둔화되었음.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12월	2025 1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689 (4.6)	3,869 (4.9)	3,966 (2.5)	4,079 (2.9)	4,205 (3.1)	4,608 (4.0)	4,750 (3.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893 (4.7)	4,095 (5.2)	4,211 (2.8)	4,338 (3.0)	4,472 (3.1)	4,918 (4.2)	5,071 (3.1)
	정액급여	3,181 (3.4)	3,319 (4.3)	3,444 (3.8)	3,555 (3.2)	3,653 (2.7)	3,733 (2.7)	3,838 (2.8)
	초과급여	208 (3.7)	220 (5.7)	227 (3.3)	240 (5.8)	254 (5.6)	240 (2.7)	262 (9.0)
	특별급여	504 (14.3)	556 (10.4)	540 (-2.9)	542 (0.4)	566 (4.3)	945 (10.8)	971 (2.8)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700 (3.9)	1,747 (2.8)	1,785 (2.2)	1,809 (1.4)	1,745 (-3.5)	1,784 (-4.4)	1,797 (0.7)
소비자물가지수		102.5 (2.5)	107.7 (5.1)	111.6 (3.6)	114.2 (2.3)	116.6 (2.1)	114.9 (2.0)	117.6 (2.3)
실질임금증가율		2.0	-0.2	-1.1	0.5	0.9	2.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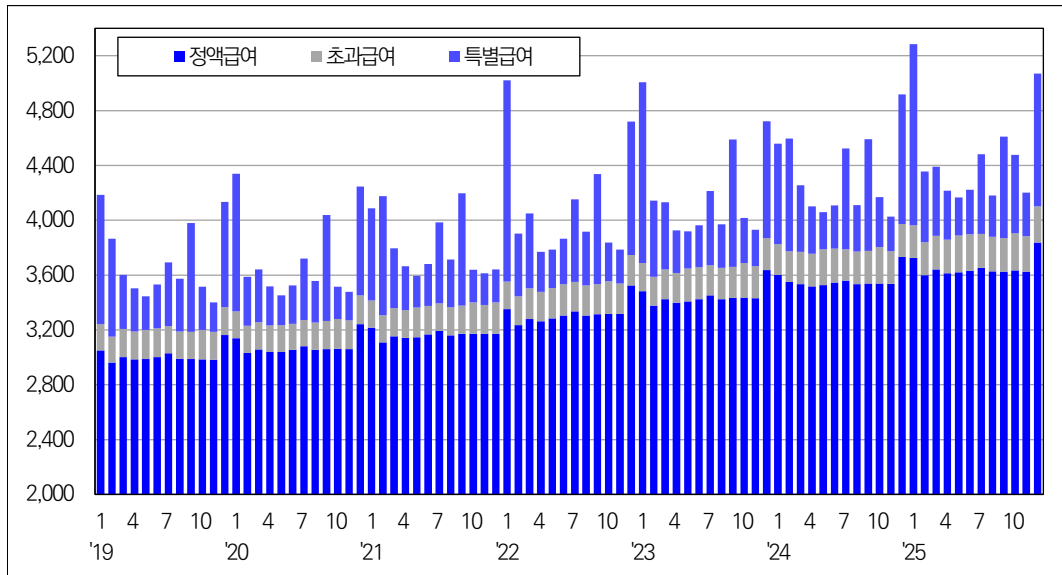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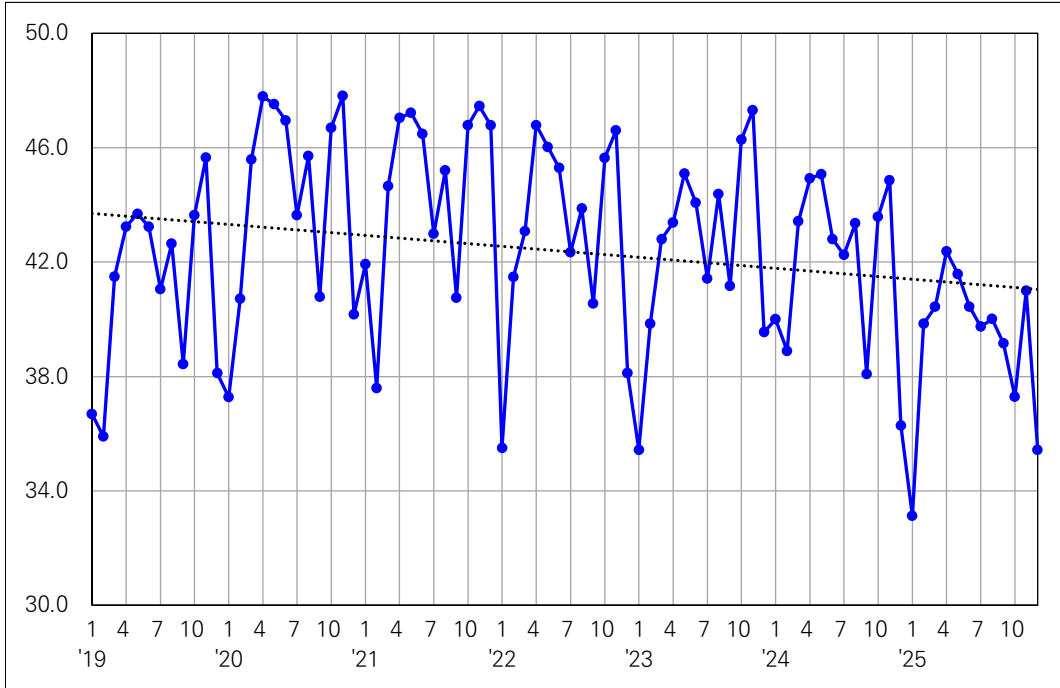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5년 12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증가폭 크게 축소

○ 2025년 12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416만 7천 원)과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751만 1천 원)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9%, 2.6% 증가하였음.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데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폭이 0%대에 그친 영향이 큼.
- 특히 제조업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5.8% 증가에 그쳐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 제조업 중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특별급여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3.9%p, -62.3%p 축소되었음.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증가폭은 전년동월과 같은 2.9%였음. 상용근로자의 임금증가폭은 소폭 축소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증가로 전환되었음.
-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하였음.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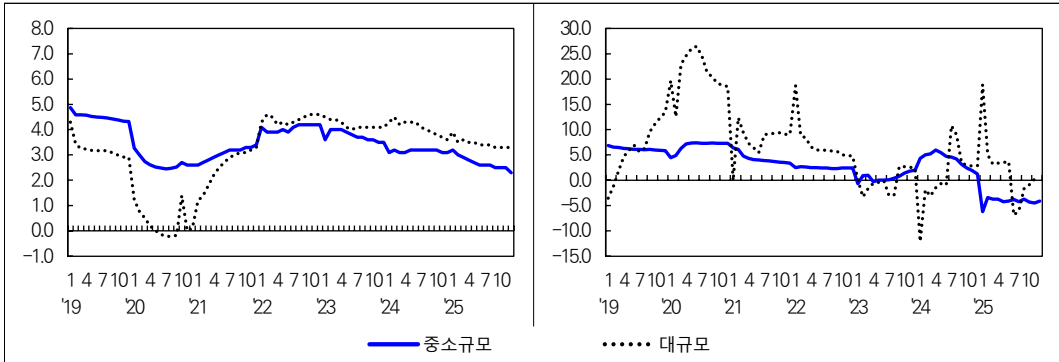
		2023	2024	2025	2024	2025
					12월	12월
중소 규모	소 계	3,537 (2.2)	3,479 (3.0)	3,733 (2.5)	4,051 (2.9)	4,167 (2.9)
	상용임금총액	3,767 (2.5)	201 (3.2)	3,986 (2.6)	4,343 (3.2)	4,467 (2.9)
	정액급여	3,249 (3.5)	663 (3.1)	3,433 (2.5)	3,479 (2.6)	3,568 (2.5)
	초과급여	187 (0.8)	1,731 (5.6)	205 (3.9)	201 (3.1)	214 (6.5)
	특별급여	331 (-5.3)	7,318 (2.6)	348 (2.3)	663 (6.4)	686 (3.4)
	임시일용임금총액	1,746 (2.0)	7,498 (1.2)	1,695 (-4.1)	1,731 (-5.3)	1,748 (1.0)
대규모	소 계	6,071 (2.5)	4,873 (2.5)	6,472 (4.0)	7,318 (6.7)	7,511 (2.6)
	상용임금총액	6,212 (2.7)	418 (2.4)	6,631 (4.2)	7,498 (6.6)	7,719 (3.0)
	정액급여	4,325 (4.1)	2,207 (3.6)	4,629 (3.3)	4,873 (2.9)	5,023 (3.1)
	초과급여	406 (7.6)	2,583 (6.1)	468 (8.8)	418 (1.6)	474 (13.3)
	특별급여	1,481 (-2.3)	3,642 (-2.0)	1,534 (5.7)	2,207 (17.0)	2,222 (0.7)
	임시일용임금총액	2,375 (2.3)	3,887 (2.9)	2,439 (-0.2)	2,583 (5.1)	2,449 (-5.2)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5년 중소·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각각 2.5%, 4.0% 증가

○ 중소기업의 임금증가폭은 전년대비 축소된 반면 대규모 기업의 임금증가폭은 확대되었음.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증가폭이 확대된 데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플러스(+) 전환된 영향이 컸음.

◆ 2025년 12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임금 증가

- 2025년 12월 임금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7.6%), 숙박 및 음식점업(6.5%)이었음.
-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8%, 14.1% 증가하였음.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3	2024	2025	2024	2025
				12월	12월
전 산업	3,966 (2.5)	4,079 (2.9)	4,205 (3.1)	4,608 (4.0)	4,750 (3.1)
광업	4,636 (0.6)	4,900 (5.7)	4,898 (0.0)	5,078 (8.5)	5,371 (5.8)
제조업	4,633 (3.3)	4,755 (2.6)	4,917 (3.4)	5,602 (6.7)	5,833 (4.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188 (4.1)	7,687 (6.9)	7,874 (2.4)	9,781 (20.2)	10,522 (7.6)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4,297 (3.1)	4,431 (3.1)	4,534 (2.3)	5,409 (3.6)	5,372(-0.7)
건설업	3,359 (4.0)	3,455 (2.9)	3,550 (2.7)	3,664 (4.8)	3,688 (0.7)
도매 및 소매업	3,921 (3.9)	4,031 (2.8)	4,133 (2.5)	4,415 (0.8)	4,559 (3.3)
운수 및 창고업	4,185 (3.6)	4,326 (3.4)	4,470 (3.3)	5,161 (3.7)	5,214 (1.0)
숙박 및 음식점업	2,097 (4.7)	2,134 (1.8)	2,209 (3.5)	2,178(-0.3)	2,318 (6.5)
정보통신업	5,120 (2.4)	5,338 (4.2)	5,503 (3.1)	5,860 (0.9)	6,022 (2.8)
금융 및 보험업	7,338 (0.2)	7,443 (1.4)	7,887 (6.0)	9,346 (0.0)	9,374 (0.3)
부동산업	3,117 (1.0)	3,165 (1.5)	3,218 (1.7)	3,304 (1.2)	3,452 (4.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464 (1.6)	5,646 (3.3)	5,787 (2.5)	6,871 (6.1)	7,163 (4.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687 (4.0)	2,787 (3.7)	2,846 (2.1)	3,021 (3.3)	3,080 (1.9)
교육서비스업	3,508 (2.1)	3,602 (2.7)	3,684 (2.3)	3,524 (2.3)	3,661 (3.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32 (0.3)	3,218 (2.7)	3,350 (4.1)	3,362 (2.9)	3,526 (4.9)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58(-0.6)	3,111 (1.7)	3,170 (1.9)	3,301(-0.1)	3,441 (4.2)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009 (6.2)	3,126 (3.9)	3,199 (2.3)	3,363 (4.9)	3,449 (2.5)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12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12월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052만 2천 원)과 금융 및 보험업(937만 4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16만 3천 원) 순이며, 임금총액이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31만 8천 원)이었음.

◆ 2025년 모든 산업에서 전년대비 임금 증가

- 전년대비 임금증가폭이 컸던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1%), 숙박 및 음식점업(3.5%), 제조업(3.4%)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광업(0.0%), 부동산업(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9%)의 임금증가폭은 평균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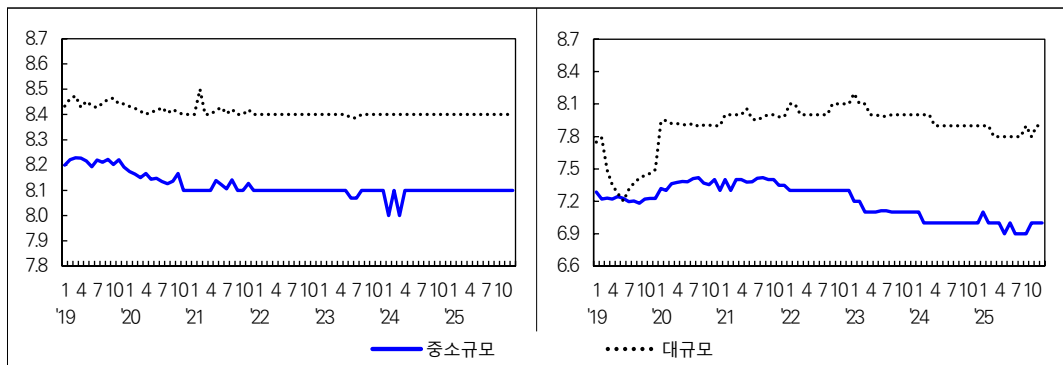
◆ 2025년 12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5.4시간 증가

- 2025년 12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3.2시간(5.4시간 증가)이었음.
- 12월 근로시간의 감소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1일 증가한 영향이 컸음.
- 상용근로자(171.6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영향이 크며, 12월 기준 근로일수가 1일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6.0시간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85.9시간)는 0.3시간 감소하였음.

◆ 2025년 12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 근로시간 증가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5년 12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4시간, 5.2시간 증가하였음.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3	2024	2025	2024	2025
					12월	12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55.3(-1.9)	153.9(-0.9)	152.8(-0.7)	157.1(3.2)	162.5(3.4)
	상용 총근로시간	164.0(-1.1)	163.0(-0.6)	161.6(-0.9)	166.3(3.7)	172.3(3.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6.7(-0.9)	155.6(-0.7)	154.3(-0.8)	159.0(3.9)	165.0(3.8)
	상용 초과근로시간	7.3(-5.2)	7.4(1.4)	7.3(-1.4)	7.3(-1.4)	7.3(0.0)
	임시일용 근로시간	88.2(-8.5)	84.3(-4.4)	82.3(-2.4)	84.4(-4.6)	84.0(-0.5)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5(0.1)	159.4(-0.7)	158.3(-0.7)	160.9(3.1)	166.1(3.2)
	상용 총근로시간	162.1(0.2)	161.3(-0.5)	160.2(-0.7)	162.7(3.3)	168.4(3.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0.9(0.2)	149.8(-0.7)	148.8(-0.7)	152.0(3.8)	157.5(3.6)
	상용 초과근로시간	11.2(1.8)	11.4(1.8)	11.4(0.0)	10.7(-2.7)	10.9(1.9)
	임시일용 근로시간	117.5(-5.9)	111.9(-4.7)	109.6(-2.1)	113.1(-2.4)	111.0(-1.9)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5년 12월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25년 12월 근로시간 증가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5.9%)이었음.

-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78.8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78.0시간) 순이었고,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6.2시간)이었음.

◆ 2025년 근로시간은 153.8시간으로 전년대비 1.1시간 감소

○ 2025년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감소(-2일)로 전년대비 1.1시간 감소하였음.

-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한 영향과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이 컸음.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모두 1.1시간 감소하였음.
-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근로시간은 1,846시간으로,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13.2시간 감소하였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시간, %)

	2023	2024	2025	2024	2025
				12월	12월
전 산업	156.2(-1.6)	154.9(-0.8)	153.8(-0.7)	157.8(3.3)	163.2(3.4)
광업	168.5(-3.6)	169.9(0.8)	166.1(-2.2)	173.6(3.0)	174.7(0.6)
제조업	170.5(-0.4)	169.7(-0.5)	168.0(-1.0)	172.9(3.5)	178.8(3.4)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0.0(0.9)	156.6(-2.1)	155.5(-0.7)	156.2(-3.0)	162.8(4.2)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170.0(-2.5)	169.2(-0.5)	168.8(-0.2)	171.4(2.0)	178.0(3.9)
건설업	128.7(-4.2)	127.7(-0.8)	129.3(1.3)	131.9(3.7)	136.2(3.3)
도매 및 소매업	159.2(-1.9)	157.8(-0.9)	155.6(-1.4)	160.3(3.4)	164.6(2.7)
운수 및 창고업	160.6(0.0)	159.5(-0.7)	158.4(-0.7)	161.7(2.1)	166.7(3.1)
숙박 및 음식점업	138.8(-5.3)	136.6(-1.6)	138.0(1.0)	138.0(0.0)	146.1(5.9)
정보통신업	162.2(-0.3)	161.8(-0.2)	160.7(-0.7)	163.6(4.4)	169.7(3.7)
금융 및 보험업	159.3(-0.3)	157.7(-1.0)	156.2(-1.0)	159.6(4.7)	165.4(3.6)
부동산업	167.5(-1.1)	166.3(-0.7)	164.9(-0.8)	168.9(2.1)	175.0(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8.8(-0.9)	157.5(-0.8)	156.3(-0.8)	159.1(4.1)	165.2(3.8)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58.2(-1.0)	157.5(-0.4)	154.4(-2.0)	160.0(2.9)	163.8(2.4)
교육서비스업	135.9(-0.1)	134.1(-1.3)	132.2(-1.4)	136.2(3.4)	140.7(3.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0.7(-3.0)	148.3(-1.6)	147.6(-0.5)	152.7(3.2)	158.4(3.7)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8.2(-1.7)	145.7(-1.7)	145.0(-0.5)	144.1(0.8)	151.9(5.4)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0.3(0.0)	159.5(-0.5)	159.1(-0.3)	163.9(3.5)	167.9(2.4)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2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6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13건
 - － 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05건)보다 8건 많은 수치임.
- 2026년 2월 조정성립률 66.0%
 - － 2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61.0%보다 5.0%p 높은 수치임.

〈표 1〉 2025년, 2026년 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6. 2.	113	79	42	23	19	21	0	21	2	14	31	66.0%
2025. 2.	105	86	43	19	24	27	2	25	1	15	19	61.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6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은 없음.
 - － 전년 동월의 경우,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1건임.

〈표 2〉 2025년, 2026년 1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6. 2.	0	0	0	0	0	0
2025. 2.	1	1	1	0	0	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6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8,614건
 - 2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6,098건)보다 2,516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8.9%(33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91.1%(3,397건)를 차지함.

〈표 3〉 2025년, 2026년 2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6. 2	8,614	3,728	286	45	820	118	1,406	1,053	4,883
2025. 2	6,098	3,197	240	34	730	68	1,102	1,023	2,89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6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¹⁾ 건수는 105건
 -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46건)보다 59건 많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6.9%(24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3.1%(41건)를 차지함.

〈표 4〉 2025년, 2026년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6. 2.	105	65	23	1	16	1	24	0	40
2025. 2.	46	24	6	0	14	0	4	0	2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개정 노조법 시행과 원·하청 교섭 요구 본격화

-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됨. 노동계는 원·하청 교섭 요구를 본격화함.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3월 10일 20시 기준,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조합원 8만 1,600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됨. 민주노총 소속은 218개 원청, 357개 하청 조직, 6만 7,200명, 한국노총 소속은 9개 원청, 42개 하청 조직, 9,200명 수준이었으며, 미가맹 하청노조 등의 교섭 요구도 포함되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공공부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교섭 요구가 확산됨.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제조대기업을 상대로,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함.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은 공항·도시철도·대학·지자체 민간위탁 분야 등 공공부문 원청교섭을 추진하였고, 서비스연맹은 택배·백화점·면세점·우정사업본부 등에서 원청 책임 강화를 요구하였음. 한국노총은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중심으로 교섭을 추진하였음.
- 시행 첫날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착수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로 파악되었음. 같은 날 하청노조 등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1건으로 집계됨.
-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의 해'로 설정하고, 교섭 거부 시 집회와 쟁의 절차를 거쳐 7월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금융 콜센터, 포스코 등에서 업종별·사업장별로 교섭을 추진하되, 공공부문에서는 노정협의체 활용과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건설 부문에서는 발주처·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제조업에서는 생산·노무 통제, 서비스업에서는 수수료·업무량 결정권, 공공부문에서는 민간위탁·자회사 운영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결정권이 원청교섭 요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 정부는 시행 초기 교섭요구 현황을 집계·공개하고,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운영,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판단 지원,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협의 등을 통해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이재명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과 사회적 대화 재가동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6년 3월 19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1기 출범식을 열고 '사회적 대화 2.0'을 공식화함.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약 9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체계를 재가동한 것으로, 대통령이 출범식에 직접 참석한 점에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 새 정부 1기 경사노위는 단순한 대화 재개를 넘어,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구조적·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이를 위해 본위원회는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논의축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노사관계 제도발전, 청년 일자리, 산업안전보건,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등이 제시됨.
- 이번 경사노위 1기는 한국노총, 한국경총, 정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출범하였고, 본위원회에는 17명 중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짐. 다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대화가 제도적으로는 재개되었으나 노동계 대표성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남아 있음.
- 출범 이후 노사정은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대표자 정례 만남을 추진하였고, 3월 26일 제1차 대표자 만남을 계기로 월 1회 정례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음. 이는 단기 합의 도출보다 상호 신뢰 축적과 대화의 지속성을 우선하는 운영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경사노위 1기의 성패는 이러한 정례 대화가 실제 정책 조정과 사회적 합의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총, 「2026 신규채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6.6%가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하였음. 이는 전년(60.8%)보다 5.8%p 증가한 것으로, 기업심리 회복과 함께 채용 여건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해석됨.
-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가운데 채용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이 62.2%로 가장 많았고, '축소'는 17.4%, '확대'는 14.1%로 나타남.
- 신규채용 방식은 '수시채용만 실시'가 54.8%로 가장 높았고, '정기공채와 수시채용 병행'은 35.0%, '정기공채만 실시'는 10.2%로 나타남.
- 기업이 신규채용 시 가장 중시하는 평가요소는 '직무 관련 업무 경험'(67.6%)이었으며, 올해 채용시장 트렌드로도 '직무중심 채용 강화'(72.2%)가 가장 많이 지목됨.

◆ 삼성전자 파업 결의와 삼성그룹 원청교섭 요구 확산

- 삼성전자 노조는 정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을 토대로 파업 방침을 확정함. 공동투쟁본부는 4월 집회와 5~6월 파업 일정을 제시함.
- 2026년 임금교섭은 OPI 상한 폐지 및 산정기준 개편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상태를 보임. 노조는 영업이익 기준 전환과 상한 폐지를 요구한 반면, 회사는 선택형 기준과 임금인상안을 제시함.
- 노사는 3월 25일, 교섭을 재개하였으나 사흘 만에 다시 중단함. 노조는 핵심 요구 미반영과 사측의 불성실 교섭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요청함.
- 교섭구조는 삼성전자지부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나타냄. 이는 성과급 제도 논란과 반도체 부문 보상 문제에 대응하여 조합원 결집과 교섭력 강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 삼성그룹 내에서는 금융자회사 노조를 중심으로 원청교섭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임금·성과급 교섭과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중층적으로 제기되는 양상임.

◆ 발전산업 직접고용 추진과 노정대화·노노갈등

-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운영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발전설비 경상정비 노동자 593명을 2026년 상반기 내 직접고용하고, 후속 직제·처우 문제는 한전KPS 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음.
- 그러나 한국노총 산하 전력연맹 등 발전공기업 정규직 노조는 해당 방안이 정규직의 고용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교섭대표노조와의 협의 없이 사실상 합의·발표되었다고 반발함.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직접고용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전KPS의 노사정협의체 구성과 정부의 합의 이행을 촉구함.
- 한편 3월 24일 대통령과 한국노총 대표자 간 정책간담회에서 전력연맹은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와 공공부문 노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발전공기업 5사 통합과 공공주도에 에너지전환, 해상풍력의 공공적 추진 필요성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전력연맹은 발전공기업 분할체제의 비효율과 중복 문제, 해상풍력의 민간·외국자본 중심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공기업 중심의 산업전환 필요성을 강조함.
- 최근 발전산업에서는 하청노동자 직접고용과 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둘러싼 정규직·비정

규직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한편, 공공부문 노정협의체 구성, 발전공기업 통합, 공공주도 에너지전환 등 산업 재편 방향을 둘러싼 노정대화도 함께 전개되고 있음.

◆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고 대응과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 긴급점검

- 3월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하는 등 총 7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감식, 사고수습,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유가족 소통, 맞춤형 보상·지원, 재해원인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추진함.
- 정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 유사 업종 중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위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2,865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함.
- 이번 점검에서는 집진기 및 전기설비 관리, 위험물 취급, 불법 구조변경, 안전수칙 준수, 피난·방화시설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교육과 화재 안전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임.
-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건설업·제조업 등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여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함.

◆ 아리셀 화재사고 항소심 구형과 중대재해 처벌 강화 요구

- 검찰은 3월 27일 아리셀 화재사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하였음.
-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방기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함. 아리셀 화재사고는 2024년 6월 24일,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중대재해로, 사망자 다수가 파견근로자이자 미숙련 노동자였음.
-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와 처벌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사례로 평가됨.

◆ 근로복지공단 ‘K-산재보험’ 구축과 산재보험 행정의 AI 전환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결정, 치료, 보상, 사회복귀 등 산재보험 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산재보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으로 산재 신청이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산재 신청은 2020년 12만 3,921건에서 2025년 18만 5,092건으로 늘었고, 업무상질병 신청도 같은 기간 1만 8,634건에서 5만 946건으로 급증함.
- 공단은 재해조사 단계에서 ‘AI 재해조사 신속분류 모델’을 도입해 산재 신청 사건을 신속·일반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사사례와 판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있음. 이에 따라 업무상 사고 처리기간은 2024년 11.9일에서 2025년 8.7일로 단축되었고, 업무상질병 월평균 처리량도 20.5% 증가함.
- 치료 및 보상 단계에서는 ‘AI 치료기간 예측 모델’과 장애판정 고도화를 추진해 진료계획서 검토와 판정의 신속성·객관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따라 진료계획서 처리기간은 평균 6일에서 2일로 단축됨.
- 직업복귀 단계에서는 AI 기반 맞춤형 일자리·직업훈련 추천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AI 산재보험 국민매니저’ 도입과 ‘K-산재데이터 글로벌 표준’ 정립도 추진할 계획임.

◆ 고용보험 하위법령 개정과 돌봄휴가 활용 여건 개선

- 고용노동부는 3월 26일부터 41일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돌봄 관련 휴가·휴직 제도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 지원과 직업훈련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우선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준도 정비하였음.
-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에는 연간 최대 1,6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0만 원의 추가 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직업훈련 수당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돌봄휴가 활용 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2026년도 제1차 추경안 의결과 고용·생활안정 지원 확대

-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 고용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총 10개 사업, 5,386억 원 규모로 편성됨. 이번 추경은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불안 완화,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청년층 집중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충격 완화 분야에는 329억 원이 증액됨.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변동 우려 업종 근로자 지원을 위해 대상 인원을 3.8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확대하였고,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대응을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도 지원 지역을 9개에서 13개로 확대함. 산업전환지원 사업 역시 훈련 인원을 400명에서 1,500명으로 늘려 대외 충격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와 재직자 고용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 생활안정 지원에는 1,215억 원이 증액됨. 체불청산지원용자는 지원 규모를 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와 신용보증대위변제 지원도 확대하여 저소득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1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 및 정책자금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함.
- 청년층 집중지원 예산은 3,86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인원을 24.2만 명에서 27.2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지원단을 신설하였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지역청년 채용과 근속 지원을 강화함. 또한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 확대와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청년층의 직무경험 축적과 산업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함.

(송민수,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전문위원)